

# EDCF ISSUE PAPER

2015년 9월  
Vol.4 No.6

## “한 눈에 보는 무역을 위한 원조 2015”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구윤정 선임조사역 (한국수출입은행 OECD DAC 주재원)

WTO와 OECD는 2007년 이후 2년에 한번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 글로벌 리뷰를 실시하여 원조 공여국, 협력국, 다자협력기관, 남남협력 파트너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AfT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 하고 AfT 이니셔티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무역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지만 AfT는 개발협력 논의에서 이미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사회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의 발효를 준비 중에 있어 AfT 추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개도국의 WTO TFA 이행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금번 EDCF 이슈 페이퍼는 제5차 글로벌 리뷰 결과를 담고 있는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 목 차

1. 무역을 위한 원조 논의
2.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주요 내용
3.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1. 무역을 위한 원조 논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란 통상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을 돕는 지원, 또는 무역협정을 통해 얻는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 개도국이 어떠한 무역 정책을 채택하여 경제발전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실증 분석들이 무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AfT는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준다는 면에서 개발협력과 연관을 맺고 있다 (맹준호, 2013).

1980년대 경제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던 탈규제화와 무역 자유화 등은 개발협력 정책에도 반영되어 IMF 및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세계경제 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조한솔, 2013),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AfT가 논의된 시초라고 보인다. AfT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7월 글랜이글스 G8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정상들은 2010년까지 무역을 지원하는 원조를 50% 이상 추가로 확대하기로 선언하였다. 같은 해 12월 홍콩 WTO<sup>1)</sup> 각료회의에서는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되었고, 이에 따라 AfT 개념 정립을 위한 작업팀(WT/AFT/1)이 구성되었다.

OECD는 동 작업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AfT 모니터링을 위한 정량적 측정지표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그림 1에서 정리한 5대 원조 지원분야가 포함된다. OECD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를 바탕으로 동 분야에 대한 ODA 지원내역을 추출하여 AfT 통계를 작성한다 (OECD/WTO, 2011).

<그림 1>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 분야



출처 : OECD AfT 웹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후 WTO와 OECD는 2007년 제1차 글로벌 리뷰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공동 주관으로 원조 공여국 및 협력국, 다자협력기관, 남남협력 파트너, 지역경제공동체 등의 AfT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Aid for Trade at a Glance"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각종 WTO AfT 국제회의 및 G20 회의 등을 통해 AfT 확대 약속의 이행이 재확인되고 있다

1) World Trade Organization

## 2.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주요 내용

### (1) 개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던 WTO-OECD의 AfT 글로벌 리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제1차~제4차 AfT 글로벌 리뷰 주요 내용

구분	주제	주요 내용
1차 (2007년)	AfT 활성화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AfT 모니터링·평가 체제 확립을 위한 논의 일환으로 CRS 코딩 체계보다 세분화된 데이터 보고 방안 마련 → 2008년 AfT 정책마커 도입
2차 (2009년)	모멘텀 유지방안	AfT 이행의 파급효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부문 파트너십, 국가·지역 경쟁력 개발 전략에 있어 무역의 주류화 강조
3차 (2011년)	AfT 이니셔티브 결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기업과의 협력,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통합 의제 등에서 AfT 이니셔티브의 역할 강조
4차 (2013년)	가치사슬과의 연계	개도국의 글로벌 생산 체제(가치사슬)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AfT의 개발 효과를 논의하고, 민간부문 참여 필요성,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직업역량(skill) 중요성, 투자 위험 감소를 위한 AfT의 역할 등을 강조

출처 : AfT 글로벌 리뷰를 바탕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 작성

가장 최근에 마무리 된 2015년 제5차 글로벌 리뷰는 제4차 리뷰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무역비용 축소와 관련된 AfT의 역할과 이를 통한 개도국의 생산능력 제고와 고용 증가, 그리고 빈곤감축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또한 제4차 모니터링시 수집된 275개 지원사례 중 약 50건이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관련 사업 으로서 무역 거래관련 시간 및 비용의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역 원활화를 제5차 모니터링의 중점 분야<sup>2)</sup>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2015 AfT 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은 ITC<sup>3)</sup>, UNDP, 세계경제포럼 등 다양한 기관이 전문 분야별 책임 집필을 통해 AfT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최빈국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 필요성,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었다.

### (2) AfT와 Post-2015 개발목표<sup>4)</sup>

UNDP는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이 가지는 잠재력을 설명하고 AfT 이니셔티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무역은 수출입 부문의 세수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내외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함으로써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자원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용 창출, 식량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5차 모니터링 중점 분야 : ① 금융 접근성, ② 비관세규제(표준화, 기술 규정 등) 준수비용, ③ 무역 원활화, ④ 무역관련 인프라

3) International Trade Centre

4) 본 장은 ‘OECD and WTO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의 Chapter 9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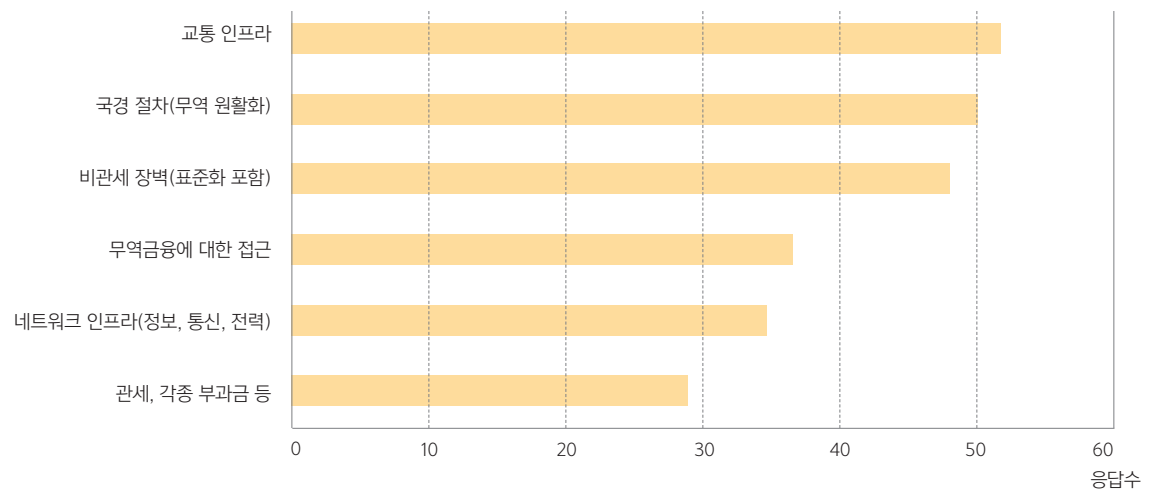
Post-2015 글로벌 개발목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개발이 다음 세대의 발전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건강한 삶, 사회적 포용성, 환경 보호 등에 보다 큰 가치를 두게 됨에 따라 국제무역 환경도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 무역상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sup>5)</sup> 등 비관세 장벽의 등장이 부정적 영향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개도국의 무역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fT는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서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쏟으면서 동시에 무역 성과와 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간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통합적 접근을 견지해야한다.

### (3) 무역비용, 글로벌 가치사슬과 지속가능한 성장<sup>6)</sup>

WTO는 높은 무역비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높은 무역 비용은 수출 경쟁력을 하락 시키고 기술 및 자본재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여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다각화 전략의 이행을 방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비용 감소를 위한 각종 조치의 혜택은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동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저소득국의 빈곤감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Post-2015 개발목표 논의와 연관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5차 AfT 모니터링에 참여한 개도국들은 재화의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교통 인프라 부족, 복잡한 국경 통관 절차, 비관세 장벽, 부족한 무역금융 지원, 통신 인프라 부족 등을 중요도 순으로 지적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재화와 서비스 무역에 있어 개도국들이 지적한 무역비용 증가 요인을 보여준다.

<그림 2> 개도국이 지적한 무역비용(재화) 증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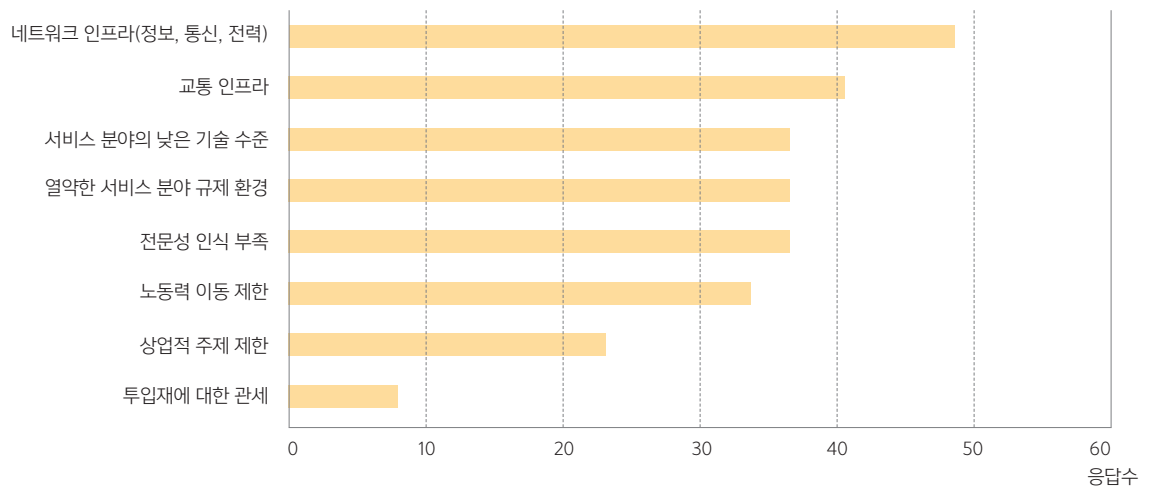


출처 : Joint OECD WTO Aid for Trade Monitoring Exercise, 2015

5) 무역 상대국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6) 본 장은 'OECD and WTO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의 Chapter 1~2 및 5~7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3> 개도국이 지적인 무역비용(서비스) 증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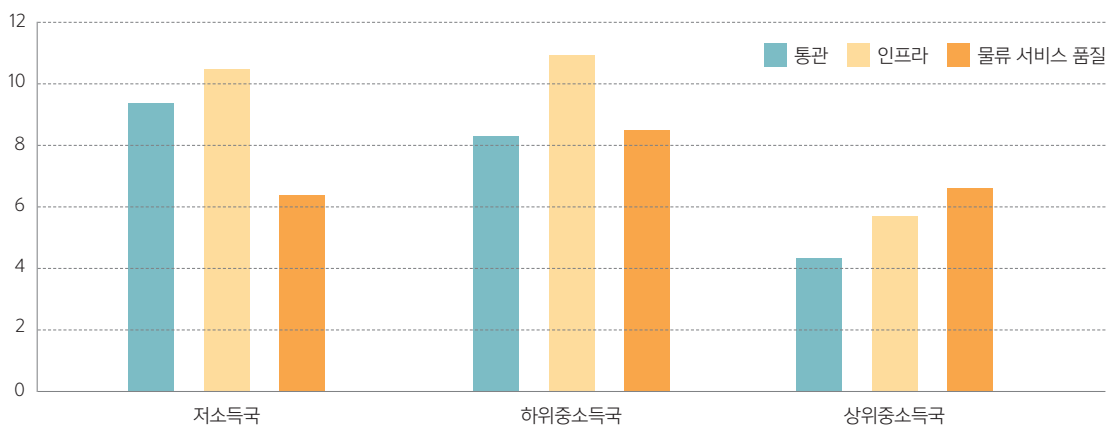
출처 : Joint OECD WTO Aid for Trade Monitoring Exercise, 2015

무역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타고난 지리적 입지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물류 효율(logistics performance), 교통 연결성, 그리고 통관개혁 등의 정책 개입을 통해 무역비용 개선이 가능하고, 각국이 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무역비용 감소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소득그룹별로는 중소득국이 무역 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저소득국에서는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한편 세계은행 물류 성과 지수(LPI)<sup>7)</sup> 조사 결과는 저소득국일수록 통관 개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무역 원활화 지원이 물류 효율성 개선에 유효한 정책이었으며,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류 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아래의 그림 4는 2007년과 2014년 LPI 최상위국의 LPI 평가 분야별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로 소득그룹별로 물류 성과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를 보여준다.

<그림 4> 소득그룹별 LPI 개선 정책 비교

LPI구성요소 변화율(%) - 2007~2014 최고 효율 달성국 비교



출처 : OECD and WTO, 2015;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07, 2014

최빈국(LDC)<sup>8)</sup>은 광물, 원유, 농산물 등 무역 비용이 높은 상품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무역비용 감축 속도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더디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리적으로는 중앙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순으로 높은 무역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내륙 최빈국은 해변 연안국에 비해 168% 높은 수출비용과 180% 높은 수입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World Bank and UN-OHRLLS, 2014).

7) Logistic Performan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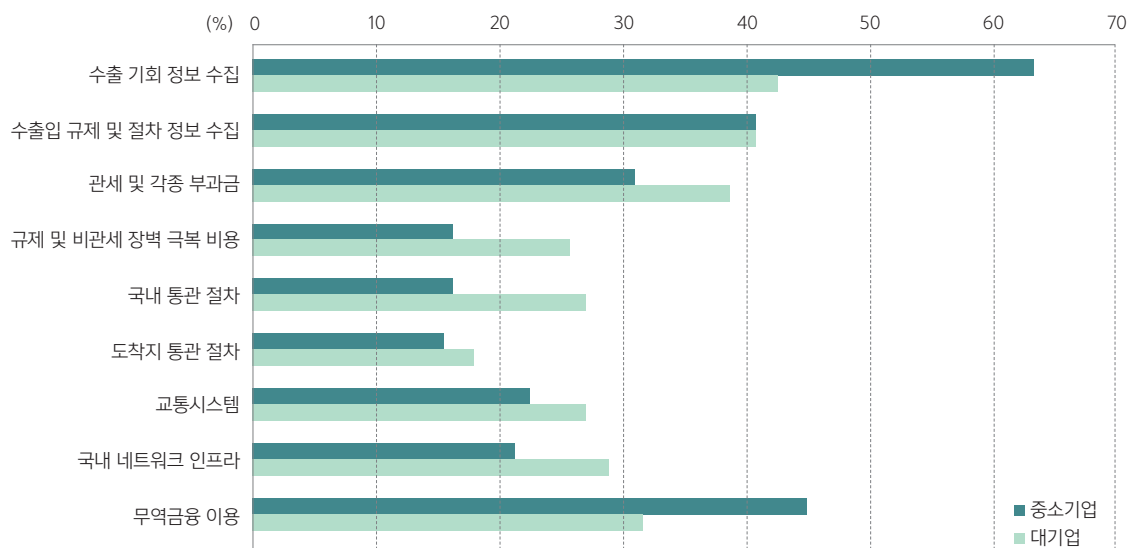
8) Least Developed Countries

하지만 최빈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최빈국에서의 무역비용 감축 노력 또한 상대적으로 더 큰 성과를 맺을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EIF<sup>9)</sup> 사무국은 이러한 점을 들어 최빈국의 경우 정책 개입을 통한 무역비용 감소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국가별 무역비용 상승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형의 인프라(soft infrastructure)와 기관 역량강화 투자에 중점을 둔 무역정책 및 개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국과 최빈국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및 공급 역량 측면에서 문제해결 없이 기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미 구축된 국제 생산체계를 개도국 기업들이 활용함으로써 다방면에서의 기초 노력을 줄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OECD는 관세, 기술, 서비스 경쟁력, 투자, 지적 재산권보호, 분쟁 해결, 무역 원활화 등 다양한 부분을 Aft로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성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OECD는 무역 원활화와 인프라 수준이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통합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을 효과적인 Aft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공사례로 ASEAN 및 중앙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CAREC)의 사업들이 예로 제시되고 있다.<sup>10)</sup>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정 비용 성격인 무역 비용 증가에 취약하다. 따라서 무역 비용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면 생산성 격차 완화 및 포용적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TC 모니터링 결과,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다양한 장애 요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수출기회 및 수출입 절차에 대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비용을 소요하며, 통관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림 5는 2015년 ITC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기업 규모별 무역비용 증가 요인 설문 결과



출처 : OECD and WTO, 2015; ITC Monitoring Survey, 2015

ITC는 위와 같은 중소기업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무역정보 수집 및 분석,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진흥기관의 역량강화가 Aft의 중요한 지원 분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ITC는 또한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sup>11)</sup> 이행이 무역원활화 개혁의 틀을 잡는 민간 대화 추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충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9)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 23개 원조 공여국이 참여하는 EIF 신탁기금을 통해 최빈국이 글로벌 무역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10) Greater Mekong Sub-region(GMS) 프로그램, CAREC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trategy (TTFS) 등

11)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4) 민간부문 참여 확대의 필요성<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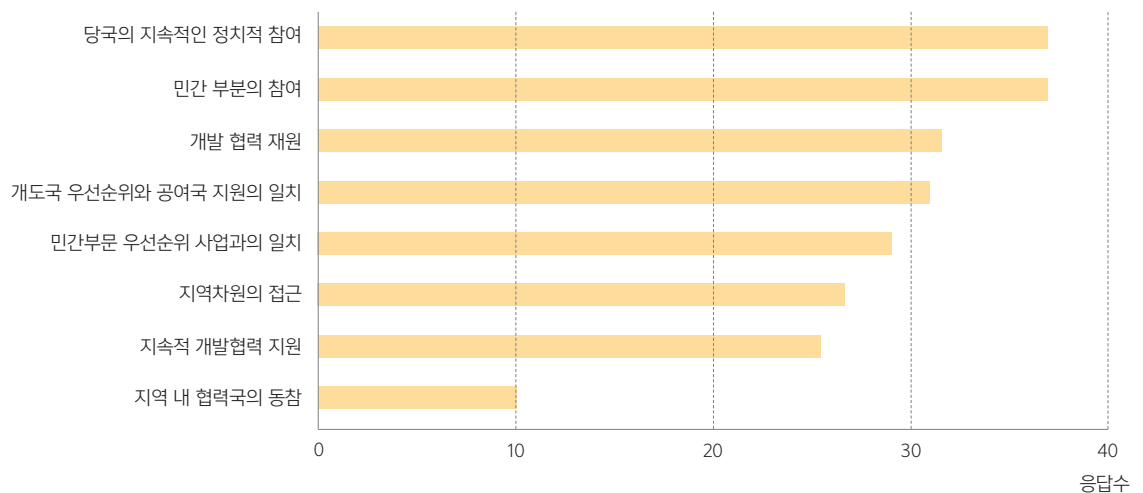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OECD는 원조 공여국이 그간 민간부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경영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개발금융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창업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점차 정부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원조-무역-투자 부문의 다양한 활동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조시행기관은 민간부문의 노하우, 생산 능력 및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수단과 협력 방식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개도국의 민간기업 설립 및 확장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최근 특징적 활동 중 하나인데, 이는 개도국에 진출하는 공여국 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는 개도국에게 성장 자원의 확보를 넘어서 경영기술 능력, 기업내 금융(intra-firm finance), 기술 파급효과(spill-over) 및 새로운 시장이라는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는 선진 민간부문의 개도국 진출이 ① 개도국 인력을 관리·학습시키고, ② 안전과 보건에 대한 표준 기준을 확산시키며, ③ 현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발 파급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는 민간부문 지원 노력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 전반에 걸친 결과와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무역 원활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정책 개혁뿐만 아니라 인적역량 구축, 인프라 개선, 도로 안전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자는 민간부문과의 밀접한 대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추진되어야 사용자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6은 제5차 AFT 모니터링을 통해 개도국이 선정한 무역비용 감소의 성공 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지속적인 정치적 노력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공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6> 개도국의 무역비용 감소 성공 요인



출처 : Joint OECD WTO Aid for Trade Monitoring Exercis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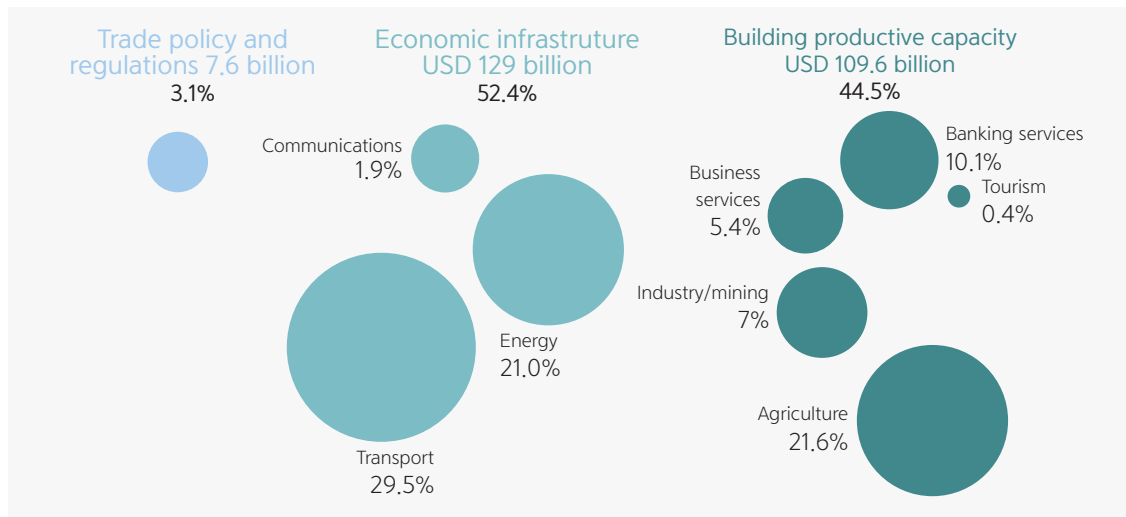
12) 본 장은 'OECD and WTO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의 Chapter 8 및 10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5) AfT 지원 현황<sup>13)</sup>

AfT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약 2,460억달러의 AfT가 집행되었으며, 지원지역은 아시아(41.7%) 및 아프리카(38.1%), 지원 분야는 교통·보관(30%), 에너지 생산·공급(21%), 농업(22%) 및 은행·금융서비스(5%)에 집중되었다.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44%)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최빈국(31.2%), 상위중소득국(21.9%) 및 기타저소득국(2.9%) 순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동안 개도국의 무역관련 분야에 대한 기타공적지원(Trade-related Other Official Flows)<sup>14)</sup>은 1,904억 달러가 집행되었다.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AfT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은행·금융서비스(21.3%) 및 산업·채굴업(19.9%) 분야에 비교적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원지역도 AfT와 마찬가지로 아시아(38.5%)에 집중되었으나, AfT와 달리 아프리카(16.3%) 보다는 중남미(24.4%)와 유럽(20.6%)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소득그룹별로는 상위중소득국(63.3%)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최빈국(3.4%)에 대한 지원은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그림 7은 2006년에서 2013년간 AfT 지원액의 지원 분야별 상대적 규모를 보여준다.

<그림 7> 분야별 AfT 지원규모 (2006~2013 집행액)



출처 : OECD and WTO, 2015; OECD DAC CRS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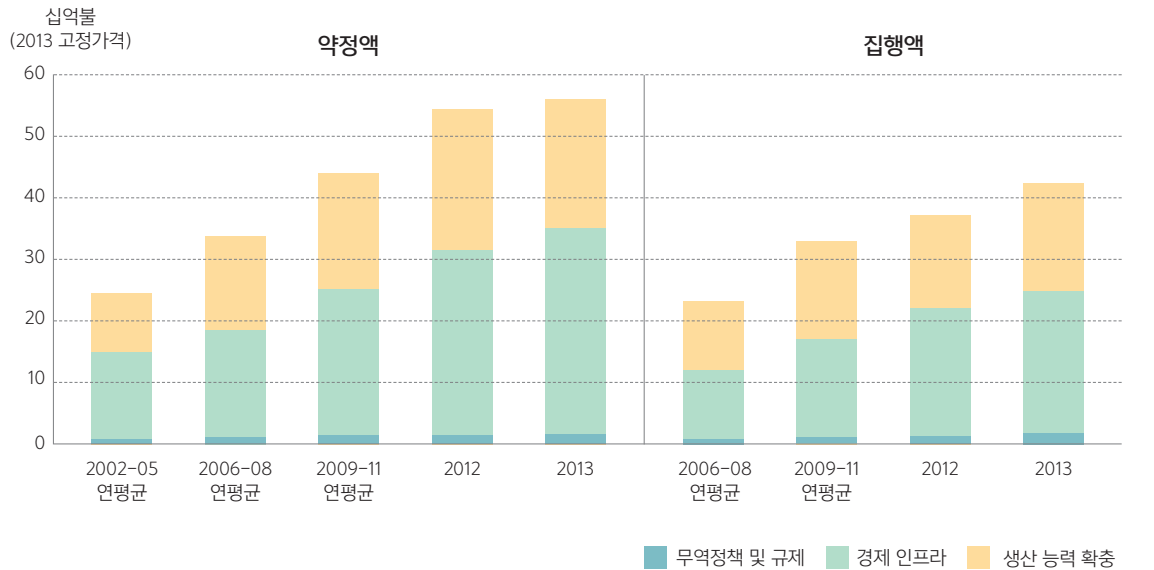
AfT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AfT 약정액은 554억달러이다. 이는 실질기준으로 기준년도(2002~05 평균)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3년 무역관련 기타공적지원(Trade-related OOF) 약정액은 488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기준년도(2002~05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그림 8 참고).

13) 본 장은 'OECD and WTO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의 Chapter 3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4) OOF란 개도국에 대한 공적지원 중 증여율 또는 지원목적에 있어 ODA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금지원을 말하며, Trade-related OOF란 OOF의 부분집합으로서 4가지 AfT 지원분야(무역정책 및 규제, 경제인프라, 생산능력 확충, 무역관련 조정)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그림 8> Aft 약정액 및 집행액 추이



Aft가 개도국의 무역 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파급효과 수준은 Aft의 유형, 수원국의 소득수준 및 지역, 지원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Aft가 무역비용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와 WTO에 따르면 Aft에 대한 1달러 투자는 개도국의 수출규모를 8달러(최빈국의 경우 20달러)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OECD and WTO, 2013).

제5차 Aft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사례에서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빈번히 지적된 효과는 수출시장 다각화, 고용 창출,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국내 투자 증가, 소비자 복지 향상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모니터링에 참여한 Aft 공여국 및 공여기관<sup>15)</sup>의 2/3 정도가 Aft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 전략 수정에 반영된 주요 전략 초점은 무역 원활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민간부문 개발 및 지역 통합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Aft 수원국<sup>16)</sup>도 무역 원활화를 우선 선호 분야로 지적하였으며, 그 뒤로 경쟁력 및 무역정책 분석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WTO 무역원활화 협정<sup>17)</sup>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은 약 10년의 협상을 거쳐 WTO 발족 이래 최초로 합의<sup>18)</sup>된 다자 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무역거래 대상 상품의 출고, 이동 및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 회원국 앞으로 이행이 권고되는 35가지 기술적 조치(technical trade facilitation measure)를 담고 있다. 동 협정은 이행에 있어 회원국별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참여<sup>19)</sup>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개도국/최빈국의 경우에는 외부의 기술 협력 및 역량개발(TACB)<sup>20)</sup>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협정 이행이 어렵다는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15) 4개 양자 공여국 및 13개 다자 공여기관

16) 최빈국 31개국을 포함한 총 62개 협력국

17) 본 장은 'OECD and WTO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의 Chapter 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8) 제9차 WTO 각료회의(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타결되어 2015년 7월 협정문을 확정하고 현재 발효 절차를 진행 중 (회원국의 2/3가 협정문 수락 시 발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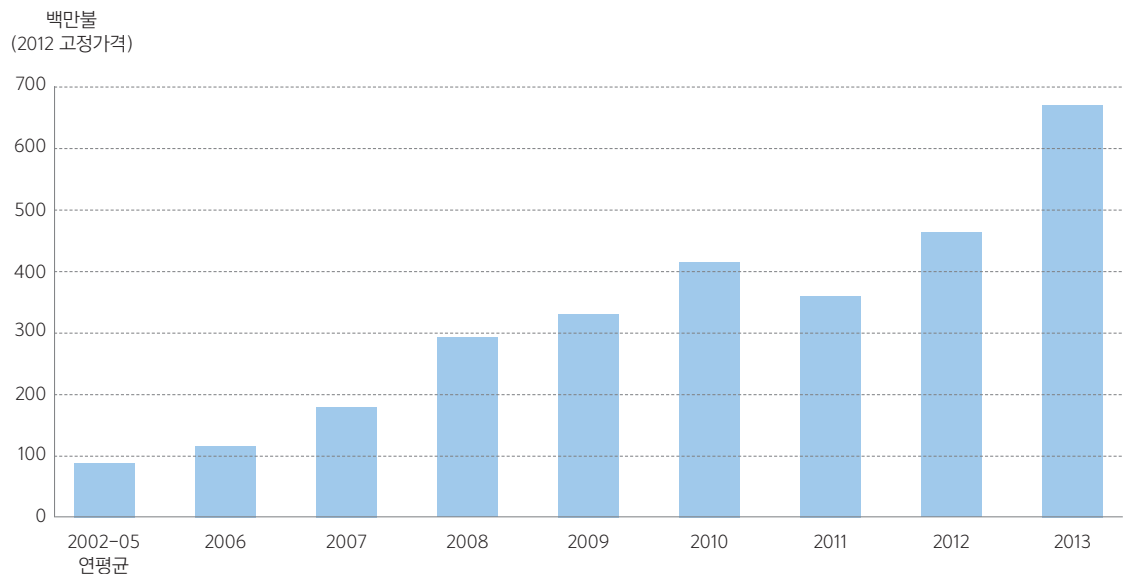
19) 국가별로 무역 원활화 관련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준비상태가 상이함을 배려한 협상 결과로, 개도국은 협정 조항별 이행계획 (① 협정발효 즉시 이행, ② 발효 후 일정기간 후 이행, ③ 발효 후 일정기간 후 이행 및 원조를 통한 능력배양 필요의 3가지로 구분)을 WTO에 통보

20)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개도국이 무역 원활화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TACB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경당국(border agency) 협력, 통관 창구 단일화(single window),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운영자 공인절차 등이 제시되었다. WTO는 사례분석을 통해 WTO TFA를 통해 이루어진 개도국의 무역 원활화 역량강화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 약속이 개도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도국 수요와 공여국 지원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WTO TFA 퍼실리티(WTO TFAF)<sup>21)</sup>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AfT 중 무역원활화 관련 약정액은 2002년에서 2005년간 연평균 8천만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 6.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참고).

<그림 9> 무역 원활화 분야 약정액 추이



출처 : OECD and WTO, 2015; OECD DAC CRS 데이터베이스

## (7) AfT 이니셔티브의 발전 방향<sup>22)</sup>

OECD와 WTO는 AfT 이니셔티브가 그동안 무역이 경제성장 및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증연구 강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발족 10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새 시대에 걸맞는 발전방향으로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및 TFA 이행 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장을 상호개방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지속한다는 당초 AfT의 정신은 아직 유효하나, 무역 비용이 개도국 시장 진입에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으므로 AfT 운영의 초점이 무역비용 축소에 맞추어질 때 비로소 수입업자, 수출업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혜택을 누리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무역가격 왜곡<sup>23)</sup>의 주요 원인에 대한 파악 및 대응책 모색과 다양한 형태의 개발금융 활용방안 연구를 수원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갈 때, 국내 규제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가능하고 공여국의 혁신적 지원수단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 WTO TFA Facility : 개도국의 WTO TFA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개도국의 현황 진단과 필요 자원의 확보를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간 정보 조율 등을 수행하며 WTO 공여국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 조성

22) 본 장은 'OECD and WTO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의 Chapter 11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3) 원산지 상품가격에 비해 비싼 수출입 상품가격

### 3.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무역을 적극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빈곤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조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에게 무역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AfT에 대한 관심과 원조 지원규모에 걸맞은 AfT 전략이 부재한 상황은 안타까운 점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전략 수립에 기본이 되는 목표 설정, 현황 파악, 추세 분석 등을 위해 ‘AfT 보고서’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AfT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 수원국을 망라하는 글로벌 모니터링 및 리뷰 결과가 사례분석, 수요조사 그리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효과적인 AfT 시행을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AfT 기획이 수요에 부응 하도록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AfT 2015 보고서는 무역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지역 연결성 확대 및 글로벌 가치가슬 참여 지원으로 AfT가 개발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한국의 ODA 지원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욱 눈여겨 볼만 한 대목이다. 나아가 앞으로의 도전과제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개별국가를 넘어 대륙권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고 이를 무역원활화 사업과 연계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개발협력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무역원활화 관련한 전문성 겸비도 함께 요구 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투자-개발협력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선진공여국이 이러한 점을 수용하여 민간 협력 강화,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 확대 등 AfT 이행 방식을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투자 및 무역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협력 시행을 통해 공여국에서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수원국에서는 개발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ODA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어<sup>25)</sup> 이미 다각화된 협력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잠재력을 십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24) <http://www.oecd.org/aidfortrade/aidfortradeself-assessmentsfromdacmembers.htm>

25) OECD 및 WTO에 따르면 한국은 Trade-related OOF의 최대 공여국으로 개도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규모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OECD and WTO, 2015).

**<참고문헌>**

강인숙 (2013). Aid for Trade와 투자분야 원조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2013년 No. 1. 한국수출입은행  
맹준호 (2013). 무역을 위한 원조 논의 배경과 효과성 제고 노력. 한국의 개발협력 2013년 No. 1. 한국수출입은행  
조한솔 (2013). 개도국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OECD (2014). 5th Global Review of Aid for Trade. DCD/DAC(2014)54  
OECD and WTO (2011).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1 : Showing Results. OECD Publishing, Paris  
\_\_\_\_ (2015).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5 : Reducing Trade Costs for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World Bank and UN-OHRLLS (2014). Improving Trade and Transport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 A Ten Year Review. Washington D.C., New York

감수 : 임소진 선임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